

### 전주 특례시 지정, '1÷2아닌 1+1'

# 지역 불균형 돌파구 되나?

####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 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다.

또한, 전주처럼 도(道)의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인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입지는 더욱 약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는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중심지로써 조선시대 3개 도시로 불렸고,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개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되고, 전북은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또한, 샌드위치 신세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발전을 이끌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현상도 해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분권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자치시, 20만 이상 5개 도시)과 영국(통합시, 20만 이상 126개 도시), 일본(지정시, 50만 이상 20개 도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고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1÷2' 아닌 '1+1'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특례시가 되더라도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 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특례시 지정에 이어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역을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재원 증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주 특례시 지정이 실현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작, 지방분권 실현 끝까지 앞장선다

전주시 2018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65만2879명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살거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다. KT가 지난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완주 생활인구는 103만2993명으로 각각 조사돼 광역시의 비수하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향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1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장이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도표를 보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적극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회와 관할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건의키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에 충북 청주시, 전주·청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균형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특례시가 광역시가 있는 다른 지역처럼 두 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다. /송효철 기자

### '재산 허위 신고'

#### 김이재 도의원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는 6·13지방선거 선거공보에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로 김이재(57) 전북도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별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정의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다. 꼼꼼히 살피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고인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락 신고를 한 규모가 커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영장 기각... "도주우려 없어"

####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형제

니가 도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수시로 만나며 대표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24평대형 아파트에서 살며 대표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사인한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줬다"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최 전 교육감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상황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워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차명 사회에서 실명 사회로 가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행위를 국민이 용서하겠느냐"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 아연판 흠친 화물차 기사 검거

화물차 기사가 물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연판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연판 운송을 부탁받은 피의자 A모씨(32)가 지난 9월18일 오후 4시30분경 익산시 B면의 한 창고에서 25t 중 2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취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금만 빼돌리면 모를 줄 알고 그랬다"며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금암광장 교차로 4지로 교통체계로 변경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의 교통체계가 운전자에게 익숙한 네거리처럼 바뀐다.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금암광장 교차로는 그간 두 개 방향에서 온 차량이 같은 차로 위에서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도 많아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워진 금암광장 교차로 교통체계는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와, 5지형태의 불합리한 기하구조를 운전자에게 익숙한 4지형태의 교차로로 정형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린대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해지고, 경기장방향에서 기린대로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팔달로 방면으로 잘 못 접어드는 등 뒤늦은 차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안전상의 문제를 해소시켜 교통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안·남원 방면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팔달로를 통해 진북광장 교차로로 진행하지 않고도 신설교차로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우회 거리가 짧아지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향후 새로운 교통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교통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통안전시설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1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관련 분야별 위원회 위원, 인권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전주를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함께하는 전주시 인권센터 설립 1주년 기념행사로, 전주시인권센터의 인권기구로서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송효철 기자

### 전통과 미래가 만난다

#### 전주시, 2030 전주문화비전 용역 추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문화정책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2030년 미래변화에 대응해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 갈 수 있는 장기 문화발전전략인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수립해온 2030 전주 문화비전은 전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문화영역을 아우르고, 전주시 문화·예술을 총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장기 문화발전 전략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로 소통하는 공동체 구현 △전통이 미래 가치로 재창조되는 도시 △융·복합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의 3대 목표와 4대전략·12개 세부전략으로 이뤄진 문화발전전략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발전전략이 마련되면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의 자긍심과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2030 전주 문화비전의 주요 4대 전략(안)은 △문화정책성 강화 및 차별화 △예술창조생태계 활성화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이다.

또한, 12개 세부전략안은 △미래지향적 문화혁신 추진 △전주의 문화잠재력 극대화 △문화예술의 사회적참여 확대 △협업과 창의의 증진 △문화에 신예술시장 개척 △도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기반으로서 문화적 자산 활용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적 자산 활용 △문화도시발전축 및 문화환경조성 △지역민 문화다양성

활동역량강화 △문화산업거점 및 국제관광가치 제고 △미래융합가치 4차 혁명 연계이다.

시는 2030 전주문화비전에 시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문화·예술·도시역사·청년·언론 등 지역문화 전문가와 시민들로 '2030 전주문화비전 시민연구모임'을 구성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지난 9월과 10월에는 시민, 전문가, 문화매개인력 1,200명을 대상으로 전주시 문화자원, 시민 문화행유 실태, 전주시 문화비전 방향모색,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문화매개인력 활동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생활문화, 무형문화재, 전문가, 언론 등 8개 분야 1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심층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던 지역생활문화 및 문화 복지 확충방안, 글로벌 문화예술 활동역량강화 및 문화산업분야 등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진행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용역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적 융·복합 가치창출에 이바지 하도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전주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문화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